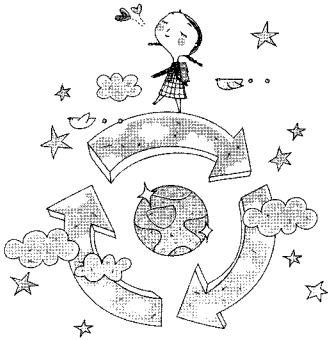


2011년 자원순환정책 주요 추진방향

박 미 자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

건국대 행정학과, 서울대 보건대학원, 미국 인디애나대(석사)
환경부 정보화담당관실, 환경경제과, 자연정책과, 생활공해과장,
환경보건정책과장 등 역임
tel. 02-2110-6910 | pmja23@korea.kr



기후 변화 대응과 녹색성장이 현 정부의 핵심국정방향으로 설정됨에 따라 폐기물분야에서도 관련부처 합동으로 폐자원·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대책, ‘도시광산(Urban Mining)’으로 일컫는 폐금속자원 재활용 대책,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을 중점 추진해 왔다.

작년에는 특히 수도권 매립지 환경에너지 타운 등 폐자원 에너지화 시설 38 개소를 확충(34개소 설치 중)하고, 2000년 시범사업을 시작한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xpanded Producer Responsibility) 10년을 기해 그간 성과에 대한 평가와 유통판매자의 책임 확대 등 제도개선 작업을 준비하였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과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호텔·뷔페, 집단급식소, 군부대, 학교, 음식점 등 12개 분야별 여건에 맞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도입을 위한 지침 마련 등 기틀을 마련하였다.

2011년에는 지난 3년의 정책성과를 더욱 확대·발전시키는 한편, 향후 5~10년의 ‘자원순환 정책방향’에 대한 새로운 좌표설정의 시기로 삼고자 한다.

음식물, 폐가전·자동차, 생활계 유가자원의 자원순환성 제고에 중점

첫째, 음식물의 경우 분야별 맞춤형대책 시범추진으로 친환경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전국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실시를 본격화해 원천적인 발생억제 정책을 대폭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무선주파수인식장치(RFID)를 활용한 수거시스템 설치 지원 등을 통해 144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자체 중에서 51개 지자체에 대해 종량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둘째, 국가경제의 ‘자원순환성(資源循環性)’ 제고를 위하여 재활용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종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민 1인당

재활용량을 기준으로 의무량을 부여하는 등 세계 일류 생산국의 위상에 걸맞게 폐가전제품·자동차의 자원순환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활용의 양적관리에서 질적관리로 전환하여 가치상향형 재활용체계(Upcycling)를 촉진하고자 한다. 폐자원의 물류개선을 위해 권역별 자원순환 관련시설의 네트워크화 등 전국단위 폐자원 순환망을 체계화하고, 지자체 및 사회적 기업 등과 협력하여 소형폐가전, 불용물품 등 생활계 유가자원의 新수거체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셋째, 폐자원·바이오매스 에너지화를 통한 자원순환형 폐기물 처리기반 확보와 녹색성장 지원도 본격화하여 수도권 매립지를 에너지 자족(自足)형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으로 조성하고, 완공 또는 설치 중인 38개 가연성 및 유기성 폐기물 자원화시설을 거점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할 것이다. 고품연료 제조 원료를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 페타이어, 폐목재 등 단일품목에서 혼합제조를 허용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검토 중이다.

향후 5~10년의 '자원순환 정책방향' 설정

우리나라는 그동안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감량하는 정책부터 재사용, 재활용, 에너지 회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시행해 왔다.

그 결과 전체 생활폐기물 발생량의 61%가 재활용되는 선순환(善循環)의 폐기물관리체계를 갖추었다. 특히, 95년 도입된 전국적인 쓰레기 종량제 정착과 2008년부터 본격화된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은 OECD, UNEP 등 국제기구에서도 주목하는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금년에는 폐기물분야 중장기 계획들이 연이어 수립될 예정이고, 앞으로 5~10년 후의 더욱 발전된 경제·사회의 미래상을 생각할 때 질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순환체제로 한 단계 선진화해야 할 전환점에서 있기도 하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1~2015)은 종전 재활용기본계획이 통합·확장된 것이지만, 위로는 범정부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자원순환분야 실행계획이자 아래로는 부분별 재활용계획,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계획 등 자원순환 관련 중장기정책을 포괄하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볼 수 있다.

동 계획에는 2015년 자원순환성 향상을 위한 새로운 지표개발은 물론, 자원순환형 사회구조로의 전환, 가치상향형 자원순환(4R) 실현, 통합형 폐기물처리 인프라 구축, 자원순환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촉진, 국가 자원순환성 평가 및 실행기반 마련 등 중점 추진전략과 핵심정책과제를 담을 예정이다.

【 자원재활용기본계획과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비교 】

구분	제4차 자원재활용기본계획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범위	환경부업무에 국한(소극적·배타적)	관계부처로 확대(적극적·통합적)
기간	2008~2012(5년)	2011~2015(5년)
목표	부문별·품목별 재활용율 관리 자원생산성·자원순환을 전방면 분석	자원순환율·최종매립량 국가목표 설정 부문별·품목별 자원순환지표 관리
	단순재활용·양적관리(Recycling)	질적관리(Upcycling)
과제	주요과제(포장재관리, 친환경상품 구매, 산업육성 등), 품목별 재활용 계획(EPR·포장재, 지정부산물, 생활폐기물, 음식물류, 건설폐기물 등), 자원순환 강화기술개발, 통계 개선, 조사 연구 등	자원순환형 사회구조 전환, 가치상향형 4R 실현, 통합형 폐기물처리 인프라 구축(최적화), 고부가가치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 자원순환성 평가·실행기반 마련
이행수단	연차별 시행계획 관리	이행평가 (매년 시·도 시행계획 수립, 2년 주기 국가자원순환성 평가 실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제3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2011~2020)은 시·도별 기본계획을 토대로 수립되기 때문에 지자체의 폐기물처리 인프라 확충 차원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 중이다.

특히,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화하거나 집적화할 경우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 환경적으로 적정처리 하는데도 유리하기 때문에 시·군구 행정구역의 탈피하여 광역화하는 등의 최적화 전략에 중점을 둘 것이다.

제1차 자원순환 기본계획은 5월 중, 제3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은 연말에 확정될 예정인데, 향후 자원순환정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새로운 전기(轉機)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